

◆ 독일 KfW, 독일 정부의 보증지원 혜택 계속 유지

독일과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주정부가 산하 주립은행(Landesbank Girozentrale)과 저축은행(Sparkasse)에 제공해왔던 지급보증 지원제도를 폐지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독일 부흥금융금고(KfW)는 6개월간에 걸친 EU 집행위원회와의 별도 협상을 통하여 독일투자개발기관(DEG)과 독일균제은행(DtA)을 포함한 공적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적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혜택을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

대신 KfW는 EU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적개발 부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2004년 3월 말까지 KfW법에 명시하는 한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수출금융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중 공적개발 지원업무(promotional tasks)를 제외한 기타 상업적 수출금융지원 업무는 2007년 말까지 자회사를 설립, 분리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향후 KfW의 국내 산업진흥을 위한 개발금융 및 개도국 개발원조는 종전과 같이 이루어지지만, 공적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EU의 지원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금융지원에 다소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지원 업무의 범위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공적개발금융을 포

함하여 EU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디케이트 파이낸싱 업무, 금융시스템 낙후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며, EU 역내에서도 교통·통신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KfW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지난해 유로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따라 150억 유로 상당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400억 유로 상당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